**CH\_5 초중등 교육개발협력 개관**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반영하여 교육개발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1990년 좀티엔 회의의 ‘모두를 위한 교육(EFA)’,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선언 실천 계획, 2015년 인천 세계교육선언을 거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30)체제에서는 초등 및 중등 무상교육의 ‘완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체제를 달성’ 한다는 과제가 설정되었다.

초등교육은 주로 6,7세에서 12, 13세 정도의 아동에 대해 무상의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중등교육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계하는 단계로서 12, 13세에서 18, 19세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중등교육은 전기중등교육(중학교교육)과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 교육)으로 구분하거나, 이를 통합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초등교육 연계전략으로서 중등교육으로 개발협력 추이가 확대되고 있는데, 중등학교교육울 통해 기초 및 생활기술, 전문기술훈련 등 성인생활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OECD DAC 회원국을 포함한 선진공여국과 신흥국들은 기초교육에 대해 대규모적이면서도 집중적인 투자를 모색하지만, 2015년까지 교육재정 지원전략 측면에서 큰 진전은 없었다. 2000년 다카르 행동계획은 교육과 보건, 여성지원 등이 결합된 통합계획에 따라 ‘범분야 지원’을 활용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의 자체 정치문화 여건과 교육체제 특성에 따라 성과 차이가 있는 한계점도 드러났다. 또한 지역분쟁, 내전 등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의 교육체제를 중점 지원하며, 학교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조하였다.

국제사회의 현재 초중등교육개혁을 위한 개발협력전략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①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무상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평등한 교육 확대 ② 포용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통해 혁신 아젠다 창출 ③ 모든 이를 위한 교육권을 달성하기 위한 양성 평등 ④ 양질의 교육을 통한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전략 ⑤ 긴급재난 및 구호 요청지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긴급한 교육개발협력- 특히 기초교육 우선 추진구상(FTI)은 GPE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교육시설, 교원정책, 지역사회의 참여활동, 교육행정 혁신, 보건 위생 등 초중등학교교육 분야에서 효율성 높은 지원전략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2015년 이후 한국교육은 인천 세계교육대회에서 경제근대화를 통한 서구 발전 모델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교육의 구조적인 혁신을 넘어서서 학습의 질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교육에 대한 접근 전략서부터 형평성 있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복지 전략, 교수-학습을 포함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 등 교육혁신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신흥공여국으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국은 교육발전성과를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고 공유하는 교육발전경험 공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과를 지속 발굴 및 연구해야 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고려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CH\_6 교육개발협력과 고등교육**

국제사회 교육 ODA 지원 금액 중 고등교육 분야 비중은 주목을 받지 못했음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5~2013년에는 37.9%에 이른다. 1960년대 말에 등장한 ‘중등후교육’이라는 개념은 대학을 중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고등교육 이외에 입학요건, 교육의 목적, 교육기간, 교육기회의 범위, 기관의 유형과 기능 등이 상이한 그 외의 기관을 포함한다. 유네스코와 OECD 등의 국제기구들은 고등교육을 대학을 포함하는 중등 이후 수준의 모든 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중등후교육(Post-secondary), 제3단계교육(Teriar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개도국에 대한 교육 지원의 근거는 인권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인적자본론)에 있다. 고등교육은 주로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간주되었으나, 고비용 문제와 소수 특권층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점, 신식민지적 종속 관계 등으로 비판 받아왔다. 그러나 Post-EFA에서는 초중등 교육 보편화, 중등교육 이수율 증가, 경제 구조 전환에 따른 새로운 지식 및 기술 습득 필요성 증가, 개방 및 원격교육 발전 등으로 고등교육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고등교육 관련 목표를 ①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 ②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의 고등교육 확보 ③ 노동시장 적합성 향상에 두고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고등교육기관은 수원국 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주체에 대한 요구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측면에서 대안적 주체로서 참여 요구가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개도국 유학생 지원과 연구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자국 전문가 파견과 연수생 초청 형태로 고등교육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 공학계 고등교육 네트워크에 일본 국내 11개 대학을 컨소시엄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영국 고등교육 개발협력 파트너십은 영국, 아시아,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 간 기술협력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정부기관들과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교직원 행정능력 향상, 농업 생산성 향상, 노동 및 직업 능력 향상, 민주주의 보건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은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지출 총액은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순이다.

한국의 장학 지원 사업은 고등교육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위한 정부와 대학 차원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젝트 사업이 일부 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대학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제적 층위에서는 공여국 대학이 직접 진출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제고하고, 수원국의 수요를 인지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 개발협력과 교류협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력의 주체로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공여국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발제]

1. 초중등교육 이수와 진학

|  |
| --- |
| 초중등교육 보급에 있어 입학률 및 등록률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 **중도탈락률**이다.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이 초중등교육을 받다가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 경험한 바가 있는 지? 혹은 고민해본 바가 있다면 경험을 나누어보고 싶다. (안승욱)  개발도상국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아이들 **모두를 전기중등교육과 고등 교육기관으로 진학시키는 것이 진정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길인가**? 아니면 가난한 학생들이 일터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일까? (손선미) |

2. 고등교육을 통한 발전

|  |
| --- |
| 공여국이 수원국의 기초교육에는 관심이 있고 논의가 활발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신애)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의 양성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주목할만한 경제발전을 한 사례**가 있는 지?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들은 **어떤 방식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안승욱)  여전히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은 일부의 특권층에 한정되고, 그 소수를 위한 교육 투자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만, 그러한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이 부족하기에 두뇌유출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과 지원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손선미)  한국에서도 K-MOOC 온라인 공개 강좌 등이 운영되어 다양한 대학교의 수업들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며, 중남미 대학교인 UNAM 등 다수의 학교가 오픈소스로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개도국-공여국 간 교육격차개선에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기술의 발전이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개도국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수원국 기본 ICT인프라? 소프트웨어 호환성 및 경량화? 관련 수료 인증(증빙) 효력 확대? (유수연) |

3.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서의 한국의 발전 경험

|  |
| --- |
| 한국의 초 중등 교육 발전 경험은 단순한 교육에 대한 투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협조와 시대적 상황이 함께 이룬 결과였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만 배워서는 그 나라에서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가 경험한 초중등 교육을 통해서 수헤국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발전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김솔)  **(KSP에 관하여)교육열에서 비롯된 한국형(or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이한 교육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해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상황이 뒷받침된 민간의 노력에 운이 더해져 이만큼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발전역사에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 **우리의 교육은 타국가의 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안승욱)  **한국의 발전경험공유사업(KSP) 이 일방적인 방향의 사업이 되지 않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유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유수연)  한국이 내부의 교육문제, 즉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소하려는 과정 에서 교육협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신애) |

4. 국제사회 글로벌 교육동향

|  |
| --- |
| *2015년 세계교육대회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글로벌 교육동향은 ‘교육’의 구조적인 혁신을 넘어서서 ‘학습’의 질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P.108)*  이는 교수자 중심의 교육전략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전략으로 전환**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 **교육개발협력 전문가들은 개도국 학습자들의 학습 요구 분석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육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가**? (손선미) |

5. 한국 교육협력의 방향

|  |
| --- |
| 최근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 한국의 교육성과에도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 경쟁체제 등 심각한 단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에게 교육 협력을 제공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신애)  **입시위주, 경쟁위주 교육 외에 한국 교육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신애)  수원국은 자신들이 키워놓은 인재를 놓치는 것이 아까울 것이고, 그 가운데,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배워가는 입장이라는 태도가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고등교육 장학금**의 형태와 이에 대한 조건들이 이들이 그들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데에 불공평한 조건은 없는지, 혹은 한국의 학과 주의, 교수의 개인주의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혹은 필요하다면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규제인 것인가? (김솔)  대학입장에서 **유학생 장학사업**은 개발협력사업보다는 대학의 국제화 수준 향상, 재원확보 방안으로 이해되고 있기에 한계점이 보이기도 한다. (유학생 선발-관리-교육-사후관리 주체 상이, 사업타당성 조사 배제, 선정기준 및 평가 내 ODA 사업 특성 반영 없음 등)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을 실효성 있는 개발협력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유수연)  수원국 교육발전의 심화를 위해서는 수원국 엘리트 층의 심도 깊은 고등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교육부 정부장학생초청 제도 외에 한국의 현실적인 고등 교육 협력 제도 및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신애)  취약국가의 경우 국가의 복원력이 약해 취약성이 만성화 되어 개발성과가 더디고, 취약성-빈곤-위기의 악순환이 이어지기에 지원을 정말 필요로 하나, 실제 사업추진 시에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기 쉽다. 이로 인해 국제기구와 원조기관 들은 별도의 취약국 지원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별도의 ‘취약국 지원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취약국 대상 ‘교육개발협력사업’ 시 특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취약국 교육사업 시행 전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의견을 공유해보고 싶다. (유수연) |

6. 교육개발협력 전문성

|  |
| --- |
|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분야전문성, 지역전문성, 국제개발협력전문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중 우선순위를 세워보며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신애)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정책자문·역량배양 사업을 통하여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식중심의 경제협력사업.

KSP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수행된다. 첫째, 양자협력 방식의 정책자문으로 대상국의 수요에 기반하여 정책연구·자문·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둘째, 다자협력방식으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대상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한다. 셋째,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으로 그간의 KSP 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사례연구 형태로 정리하여 개별 KSP 과제수행시 활용하고, 국제기구 등과도 공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

**Written by 한리라**

**1. 고등교육이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 고위 관료 연수 등 현실 사례에서는 엘리트주의로 인한 폐해가 많음 (안승욱)

- 교육대상자 선정 시 진정성, 다면적인 정성 평가, 지속적이 관리가 필요할 듯 함. 개인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이신애)

- 교육대상자들이 학습을 통해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함(김솔)

- 엘리트주의 등 엘리트 교육 시 공동체와 유리된 학습 환경에서 소속감이 약화되어 실제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힘듦 (손선미)

- 낙수효과를 위해서는 엘리트 교육도 필요함. 공동체의식이 약하더라도 교육대상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이익 추구와 자국의 개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한리라) 같은 맥락에서 장학사업의 실효성에 의문

- 장학사업 관리 수준: 현지 국가 코이카 연수생 동창회 수준, 연수 이후에도 전문 능력을 살려 본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음.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격차를 해소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가?**

- 페루 벤처 사업 사례, 투자를 위한 재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역량 수준이 낮아 역량 강화 부문으로 예산 활용안이 변경된 사례가 있음 (한리라)

- 고등교육 이상의 수준은 사업화와 연계되는 부문이 많기 때문에 교수진 및 멘토링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함 (손선미)

**3. 교육 기관의 지역 거점화**

- 한국의 경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관리 및 지원 역량이 부족하여 적절한 전문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효과성이 낮음(손선미)

4. **개발도상국 내 고등교육 성과 차이** – 대학 입학 후 수학 능력에 큰 개인차를 보임(이신애)

- 초중등교육의 학습 성과 격차가 고등교육 수학 능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듯 함(한리라)

- 개발도상국일수록 경제 수준에 따른 교육 환경, 기회의 차이로 학습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손선미)

- 온두라스의 경우 경제 수준 격차보다는 고등교육 이수 후 국내 사회에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개인적으로 학문 자체를 발전시키려고 석사 이상의 학업을 지속하는 긍정 사례도 존재함 (김솔)

**5. 한국 교육협력의 방향** –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을 이식해도 좋을까? 좋은 점은 없을까?

- 높은 교육열로 전반적인 교육 성과를 높였다는 점은 긍정적, 학습 방법에서 한국에서 시도하고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시행착오 없이 실현해볼 수 있음 (김솔)

- 한국의 경우 대안학교 출신도 고등교육 제도에 편입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입시 위주의 학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수 있어, 입시를 위한 교육을 대체할 수는 어려움 (손선미)

- 입시 경쟁이 치열할수록 도태되는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김솔) 한국의 경우 입시 경쟁이 치열에서 낙오자 발생하는 것은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특수 상황으로 볼 수 있음 (안승욱)

- 학습자들을 공교육 제도권 하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긍정적임, 중고등학교의무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EBS 컨텐츠 등 유의미함 (김솔)

- 기초 문해력, 수리력 확보로 인해 부모로부터 자녀로 기초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음. 여성교육이 보편화된 것도 긍정적임 (손선미, 김솔)

- 개도국에서의 고등교육 기회와 학습 수준의 성과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학습 능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국가 주도의 상향 평준화된 교육 시스템과 평가 제도가 좋다고 생각함 (한리라, 유수연)

- 국가 수준의 교사 양성 제도와 관리 제도,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교사로서의 지위 등이 교수 역량 강화와 개발로 이어짐 (이신애, 손선미) 단순히 컨텐츠의 전파 뿐만 아니라, 정으로 표현되는 한국 특유의 사제 지간도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침 (김솔)

- 양질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립학교와 공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교육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 (김솔)

**6. 연수 사업 실효성과 현황**

- 정부 고위공무원의 경우 네트워킹에 한정됨. 교육부 장학사업은 돌아가서도 KOICA, KOTRA 등 유관 기관 현지 채용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파급 효과가 적음 (수연)

**7. 국가별 사례 및 소수 민족 교육 관련**

- 라오스: 공산주의 체제로 국가 주도로 교육 시스템 관리, 민족 및 언어 다양성이 높음. 공교육은 라오어로 진행되지만 민족에 따라 생활 방식에 차이가 커 적응 기간 및 학습 성과에 큰 차이를 보임 (안승욱)

- 온두라스: 정부 역량 및 재원의 한계로 인해 개별 학생 1인의 학습성취도를 달성함에 따라 교사 자격을 인정하는 등 개인을 통한 학습 파급 효과를 정책적으로 디자인함. 유급 등 관리 정책 수립되어 있으나 이로 인한 이탈률도 높아 논의 소지가 있음. (김솔)

- 페루: 소수민족 언어와 공용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교사들을 통해 소수민족을 통합하는 언어 관련 교육 정책 시행 중임 (한리라).

- 동티모르: 공용어 3개로 혼동이 있으며, 생활언어(인니)와 공식 언어(행정 서식 등은 포르투갈어)의 차이로 엘리트주의가 공고해지는 경향(유수연)

- 싱가포르: 영어를 포함한 공용어가 4개이나 공용어와 민족언어 병용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 사례. 다민족 단일국가로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교육이 집중해야 할 부분과 문화 다양성 보존 및 소수민족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협력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호 보완적 🡪 선진국의 다민족, 다언어 사례도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리라)